

EC經濟統合에 대한 美國 및 日本의 對應戰略과 韓國經濟：政治・經濟的 接近

朴 振 根*

<目 次>

- I. 序 論
- II. EC經濟統合과 EC의 國際的 地位 變化
- III. EC經濟統合에 대한 美國의 對應戰略
- IV. EC經濟統合에 대한 日本의 對應戰略
- V. 美國 및 日本의 政策變化에 대한
韓國의 對應戰略

I. 序 論

1992년을 목표로 한 EC의 경제통합이 可視化되면서 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高潮되어 가고 있다.

특히 소련을 포함한 東歐의 개혁과 獨逸의 통일이 加速化되면서 EC의 經濟勢力은 全유럽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C의 국제정치적 위치 또한 급격히 향상됨으로서 EC통합 이후에는 물론 EC통합과정에서 世界經濟秩序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EC에 관한 관심은 그동안 주로 EC통합이 우리의 對EC관계에 미칠 직접적인 충격과 그에 대한 對應策에 집중되어 왔다고 보아도 큰 無理는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對EC問題接近은 중요성면에서 第1次的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EC통합이 그동안 세계를 主導해 온 美國과 日本에 충격을 주고 그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對應策이 추구되는 경우 美國과 日本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韓國經濟가 이로부터 받게 될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수 없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비록 한정된 資料의 범위에서나마 EC경제통합과정과 통합 이후에 예상되는 美國과 日本의 기본적 對應戰略을 分析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對應策을 포괄적으로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EC經濟統合과 EC의 國際的 地位 變化

1958년 EEC발족 이래 그것이 하나의 關稅同盟(custom union)이 되기까지는 18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1980년 前半期까지만 하더라도 EC통합과정은 당초의 통합스케줄에 크게 뒤지는 不振한 樣相을 보여왔다.

그러나 1986년의 Single European Act를 계기로 EC통합과정은 加速化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 EC정상회담에서 채택된 Economic and Monetary Union 목표설정은 EC경제통합을 크게 可視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도 EC경제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難題들이 남아 있으나, 1992년까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의 약 60%가 이미 타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1980년 이래 加速化되어온 EC통합노력은 주변국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EC의 실질적인 國際經濟力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EC는 국제정치적인 면에서도 강력한 勢力으로 등장하고 있다.

EC의 경제통합노력증대는 EFTA諸國(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스위츨란드 등 6개국)들로 하여금 EC와의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도록 자극함으로써 EFTA와 EC간의 공식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1989년 1월에는 EC위원회가 European Economic Space의 창설가능성까지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에는 독일의 통일이 추진되면서 EC는 統獨後 東獨의 EC흡수를 결의하는 신속함을 보임으로써 EFTA회원국들 중 이미 EC에의 개별적 가입을 신청 중에 있는 일부국가(특히 오스트리아)의 早期加入 가능성이 再論되고 있다.

東歐圈內에서는 改革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개별국들은 그들 상호간의 협력에 우선하여 EC와의 협력증진을 희망해 왔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C의 對東歐關係는 二元化된 경로를 통해 증진되어 왔다.

그 첫째는 西方 24개국들의 對東歐支援事業(G-24 또는 Phare Program)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 事業은 당초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경제지원이었던 것이 東獨, 체코, 불가리아, 유고 및 루마니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同 事業을(美國의 권유로) 주관하게 된 EC의 東歐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둘째는 이와는 별도로 東歐의 개별국들과 雙務的인 협력관계증진을 위한 무역 및 상호협력체결인 것이다. 특히 EC는 東歐諸國과 소위 association agreement까지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東歐에 대해 associate status가 주어지면 東歐의 對EC 自由貿易(그러나 東歐의 과도기적 보호무역 인정), 금융, 연구개발, 환경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合作投資,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자금지원 등이 활발해지며, 지역분쟁을 포함한 일체의 상호관련문제를 다룰 定期的인 高位會談을 통한 “정치적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東歐는 이미 associate status가 주어진 키프러스, 말타 및 터키 등과 동등한 對EC관계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EC의 EFTA 및 東歐로의 급격한 세력확장은 EC에 대한 국제적 視角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사실상 EC는 그의 통합이 임박해짐에 따라 강력한 「經濟磁石」으로 작용하여 29개의 全유럽國들을 끌어 모으고 있어 EC는 그의 통합 이후 「유럽共和國」으로 발전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성급한 추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현재 EC 내에서 EC의 지나친 對外關係 확장을 우려하는 측(특히 英國)은 EC의 “widening”보다는 “deepening”에의 우선적 노력집중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 兩者는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C의 이러한 측면은 EC의 對外關係 확대가 갖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東歐의 개혁과 그 과정에서 소련의 位置低下는 EC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크게 格下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C의 소련을 포함한 東歐에의 경제적 지원이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 지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의 변혁을 암묵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EC의 對東歐關係 증대는 EC운영위원회의 고유업무인 EC정책의 경제적 측면과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회원국들의 외무장관회의)의 고유업무인 EC정책의 정치적 측면간의 구분을 극히 모호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평가가 있고, 따라서 EC운영위원회와 EPC간의 보다 긴밀한 접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EC회원국들간의 정치적 결속 強化는 EC의 국제정치적 지위향상에 효과적으로 對應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경제문제와 국제정치문제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勘案할 때 EC의 정치적 지위변화는 그 자체로서도 向後的 국제경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III. EC經濟統合에 대한 美國의 對應戰略

80년대 초반의 美國의 對EC 貿易黑字는 그 후 赤字로 反轉되어 그 규모가 현재는 연간 200억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부문을 제외하면 美國과 EC간의 日常的 무역관계는 餘他國들과의 그것에 비해 원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상 美國內 一部の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EC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EC의 통상정책은 反덤핑規制와 相互主義原則 등에서와 같이 美國의 그것과 대체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美國은 오히려 EC의 單一化되고 強化된 對外經濟關係정책이 그의 강화된 국제정치 및 경제적 지위를 뒷받침으로 하여 추진되는 경우 餘他第3國들에 대한 美國의 現 對外經濟政策을 더욱 충실히 실현시키는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 및 기타 서어비스 분야에서 유럽에 진출해 있는 많은 美國系 多國籍企業들은 이미 충분히 歐洲化되어 있어 EC통합에 따른 對應策을 現地에서 적절히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볼 때 EC경제통합이 美國의 現 對外經濟政策에 어떠한 뚜렷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美國은 그러나 EC의 국제경제 및 정치면에서의 지위향상이 美國의 경제 및 정치적 지위를 低下시키는 데서 유발될 각종 부작용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세계경제와 정치질서를 구축하고 이끌어 가는데 있어 美國의 위신이 손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美國으로서는 앞으로 EC경제통합과 그에 따른 EC의 국제경제 및 정치적 지위향상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美國의 장기

적 이해를 저해하지 않을까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내용에 입각할 때 美國은 EC가 그의 국제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경제적 義務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되, 이를 위해서는 EC의 국제정치력이 그의 경제력에 상응할 정도로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다만 이 경우 美國은 EC가 安保와 방위면에서 좀더 큰 역할을 담당하되 그것은 現 NATO體制에 대한 代替로서가 아니라 現 NATO체제 내의 유럽軸으로서만 기능하도록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美國은 EC의 對外政策決定 과정에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점에 관해 美國內 일부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C가 Frankenstein과 같은 거대한 괴물로 성장하여 對外政策면에서 그간의 후원자를 明化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의 근거로서는 유럽과 美國은 價值觀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EC경제통합에 대한 美國의 對應戰略은 철저히 정치·경제적 接近으로서, EC의 국제정치적 책무를 경제적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각시킬 때 국제사회에서 EC의 경제적 책무 또한 동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美國이 “Little Europeanism”이나 “Fortress Europe”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에서 가장 핵심적 현안인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문제를 포함한 美·EC간의 難題들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미 체결된 캐나다와의 自由貿易協定이나 최근 中南美 문제에 대해 EC의 관심을 촉구한 것 등이 갖는 국제정치·경제적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EC經濟統合에 대한 日本 對應戰略

EC가 日本을 보는 視角이나 日本이 EC를 보는 視角은 EC와 美國간의 그것들과는 본질적으로 相異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EC는 對美貿易에서 黑字를 이룩하고 있고 安保 및 방위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데 비해, EC는 對日本貿易에서 무역분

쟁 속에 貿易赤字(연간 약 300억달러 수준)를 기록하고 있고 兩者간에는 직접적인 국제정치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초래되는 것이다.

日本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對EC關係에서 日本의 特殊性”이란 표현도 사실상 美國과 日本의 對EC관계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日本의 입장으로서의 소위 日本의 特殊性을 감안한 對應戰略을 추구할 수 밖에 없어 美國의 그것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日本에 대한 EC위원회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부문에서 日本은 귀중한 협력파트너이나 이를 포함한 좀더 폭넓은 정치·경제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공통의 價値觀 실현을 이룩해 나갈 수 있게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兩者간의 무역마찰시대가 완전히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C는 日本內「日·EC산업협력센터」등 그동안 日本이 취한 일련의 개방관련조치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산업 및 통상정책의 “개혁”은 충분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또한 EC는 日本이 그동안 美國측과 맺은 協定들을 EC를 비롯한 第3國들에 공평히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EC의 덤핑방지법개정에 대해서는 美國 및 캐나다의 그것들에 대한 것 이상으로 반발하는 등의 不公平性を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日本의 입장에서 본 日本의 핵심적인 潛在的 弱點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異質體로서 지적되고 있는 日本이 어떠한 경제블럭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점과 그의 經濟力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示唆하는 바는 日本의 국제적 孤立化는 위험적인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 잠재적 심각성은 EC 경제통합을 계기로 더욱 증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日本정부가 80년대 중반 이래 日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위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나 日本國通貨의 國際化 추진을 추구해 온 것도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日本의 EC경제통합에 대한 對應戰略은 일단은 EC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EC의 세력증대에 따른 소위 三極體制 출현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들 兩者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90년대 通商産業政策의 方向에 관한 産業構造審議會의 日·歐

협력관계에 대한 提言에서 “균형적인 三極관계의 실현을 위하여, 日本의 近代化, 國際化 과정에서 유럽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 입각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깊고 있는 日・歐관계 구축이 불가피하며, 무역, 기술 뿐만 아니라 文化的, 人的 등 多面的 교류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된 데에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日本의 EC에 대한 대응은 三極體制下에서 日本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實利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될 것이며, 이 때 美國과 EC의 관계 및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가 중요한 變數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本은 그의 EC와의 관계가 美國과 EC와의 관계에 비해 현저히 劣等한 것으로 存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C와 非經濟분야에서의 교류를 더욱 증대시키면서 EC의 강화되는 對日通商政策과 무역분쟁을 의식, EC의 對日輸出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합된 EC시장의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對EC輸入증대를 위한 조치는 美國을 의식, 外形上 결코 差別的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制約이 있다.

따라서 日本의 對EC輸入政策은 이미 설립된 日・EC産業協力센터의 활용성 증대 등을 제외하면 外形上으로는 向後 三極體制下에서 불가피하게 될 全般的인 輸入政策의 조정범위 내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日本의 對EC進出戰略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장 확보를 중심으로 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EC 對外政策의 폐쇄성과 개방성간의 딜레마에 입각한 것이다.

사실상 EC가 경제통합에 의한 市場單一化의 효과 등을 회원국들간에 최대한 共有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폐쇄적인 요소를 갖게 될 것이나 첨단산업 부문을 核으로 한 산업과 기업의 再建을 추구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개방적 요소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後者の 요소를 對EC수출의 새로운 창구로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對EC접근이야말로 경제・정치적으로 그 세력이 크게 強化된 EC와 새로운 무역마찰을 초래함이 없이 좀더 긴밀한 補完的 協力관계를 구축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産業構造審議會의 上記한 연구보고서(『90년대 통상산업정책방향』)가 과학기술향상의 촉진과 첨단산업의 加速的 發展 및 海外直接投資의 촉진

진 등을 강조한 것은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日本の 對EC接近은 직접적인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될 것으로는 볼 수 없다. 日本의 對EC관계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美國의 對EC관계에 비해 劣等한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 및 역사적인 배경과 그에 따른 價値觀의 차이, 安保 등 국제정치적인 면에서의 직접적 關係不在는 日本으로 하여금 그의 對EC政策에서 非經濟부문의 교류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할 것이다. 사실상 日本은 최근 EC와의 定例 각료회의 등을 提議한 바 있다.

한편 日本의 對EC關係는 앞으로 전개될 三極體制下에서 日本의 국제경제 및 정치적 위치에 의해 크게 左右될 것이기 때문에 日本의 對外政策은 EC를 제외한 餘他國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美國과의 관계, 東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 및 소련을 포함한 東歐와의 관계가 日本의 주관심일 것이다.

美國과의 관계에서 日本은 그것이 적어도 현재 이상으로 惡化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EC와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증진되지 않고서는 對日本경제관계에서 EC와 극히 類似한 입장에 있는 美國과의 관계악화는 美·EC관계를 감안할 때 日本을 경제적 궁지에 몰아넣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日本의 입장으로서는 美國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시키는 것이 EC의 급격한 부상이 日本에 주는 직접·간접적 압력을 견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농산물부문에서와 같이 GATT의 多者間協商 과정에서 日本은 그 事案에 따라 EC와 협력하는 입장에서 美國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 그러나 美國에 대한 日本의 기본적 입장은 경제 및 安保諸般에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개선·발전시키는 것이 그와 반대의 경우에 비해 對EC對應에서 보다 有利할 것이라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합의된 美·日産業構造調整協議 최종보고 내용을 실천해 나아가는 데 日本은 상당한 성실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美國의 日本방위력(주로 空軍力) 증강요구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을 위시한 東歐諸國과의 관계를 EC측이 主導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劣勢에 있는 對東歐關係의 만회를 위해 日本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소련과의 정치적 현안과 경제협력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가는 분명치 않으나 문제해결의 분위기 조성과 東北亞에서 日本의 지위향상을 위해 소련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나아갈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크게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東아시아의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대하여도 日本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마찰을 日本의 實益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면서 동시에 이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크게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日本의 입장으로서 東아시아의 주변국들이야말로 이들의 日本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심 때문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대로 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은 이들에게 日本이 이 지역에서 霸權主義 추구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킴없이 실질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日本 중심의 안정된 아시아경제권을 어떻게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日本은 이 지역내 개별국들의 발전정도를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신흥공업국들과에서는 日本이 말하는 소위 水平貿易의 증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그에 所要되는 資本, 技術 및 技能의 移轉을 통해 상호간의 競爭性보다는 補完性을 촉진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社會의 生理上 이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폭과 속도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주위의 상황변화 如何에 따라서 그 폭과 속도가 예상 외로 크고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日本 중심의 안정된 아시아경제권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日本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日本이 사회, 문화, 역사 및 지리적으로 近接한 이들 국가의 구체적 利益대변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日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위치확보와도 直結된 것으로서, 이미 日本은 「나카소네」행정부 당시부터 이 점을 스스로 강조해 왔고, 1988년 G-7정상회담에 앞서 신흥공업국들의 국제적 責務에 관한 餘他國들의 지적에 대해 신흥공업국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또한 최근 日本정부는 아시아 분쟁지역의 긴장완화에 日本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취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이 지역에서의 국제정치적 리더쉽 추구가 경제협력의 限界性을 의식한 데서 비롯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질적 무역불균형의 뚜렷한 시정 등에 대한 代替用으로서 활용될 餘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V. 美國과 日本의 政策變化에 대한 韓國의 對應戰略

이상에서 우리는 EC경제통합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對應戰略을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예상해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은 오늘날 국제간의 모든 정치적 이슈는 본질적으로 경제문제에 그 기초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EC경제통합과정과 그 이후에 나타날 日本과 美國의 對外(政治, 經濟)政策은 예상되는 三極體制下에서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세계경제질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美國과 日本의 정책대응이 이들에 대한 依存度가 큰 韓國經濟에 대하여 반드시 有利한 방향으로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고, 따라서 韓國의 政策當局과 企業부문으로서는 구체적인 상황변화의 정확한 예측, 적절한 판단으로 새로운 세계경제(및 정치)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韓國經濟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직면할 과제는 크게 보아 i) 三極體制下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질서의 不安에 대한 대응 ii) 美國의 새로운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및 iii) 日本의 새로운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

美國, 日本 및 EC가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三極體制는 근본적으로 不安要素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不安要素는 그간의 東西冷戰體制下에서의 정치·경제적 不安이나, 美·日 兩國 主導下의 세계경제체제가 보여준 不安과는 달리 三者간의 協力은 不安定할 수 밖에 없다는 극히 일반적 경험法則이 示唆하는 不安定성과 不確實性인 것이다.

三極體制가 소위 安定的 三極體制가 되기 위해서는 3者간의 “均衡”이 요구되며 이러한 균형은 경제적 균형 뿐만 아니라 정치적 균형 등 힘의 균형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예컨대 日本은 정치적으로는 美國과 협력하여 EC를 견제하려 하고 경제적으로는 EC와 협력하여 美國에 대응하려 하거나, 경제적으로도 事案別로 美國과 EC를 왕래하는 경우가 나타남으로써 세계경제의 흐름이 不安定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은 對外依存度가 크고 美·日·EC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큰 韓國經濟의 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C경제통합을 계기로 예상되는 美國의 對外政策은 상대적으로 그의 변동폭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美國의 自由貿易, 相互主義, 국제거래에서의 公平, 公正性 등은 이미 충분히 표방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을 포함한 一切의 對外政策이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왔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안인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에서 美國의 이익에 相反되는 결과가 EC와 日本의 담합에 의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三極體制下에서 요구되는 美國의 位置를 감안할 때 그러한 가능성의 정도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美國은 EC의 對外經濟政策基底가 갖는 美國의 그것과의 類似性에 입각, EC경제통합을 特定國과의 추가적 마찰을 초래함이 없이 기존의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결국, 韓國의 입장에서 美國의 기존정책방향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극히 위험한 것이며, 기존의 정책방향에 대한 확실한 대응에 주력하면서 韓·美·日 三角關係의 중요성을 감안, 美國과 日本의 관계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尙後 韓國經濟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역시 日本의 對外政策이 아닐 수 없다.

日本과의 기술, 기능 및 과학협력 문제, 만성적 무역불균형 시정문제, 韓蘇, 韓中 및 南北韓 관계개선을 위한 日本의 역할문제 등과 관련된 韓日協力

與件이 일단은 韓國側에 有利한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정도가 그의 폭과 속도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韓日간의 새로운 協力の 실현정도는 새로운 국제적 상황에 대한 日本의 대응전략을 勘案한 韓國의 對日本接近戰略의 내용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日本에서는 내부적으로도 通商白書와 上記한 産業構造審議會 보고서 등에서 “국제적 責務와 役割”이나 “국제사회에의 공헌과 自己改革” 등의 표현으로 정책변화의 불가피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輸入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輸入活動에 대한 稅制支援 및 각종 情報센터의 설립 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對外貿易마찰 해소를 위해서는 “國內 諸制度和 慣行의 國際的 調和”나 “國內市場의 透明性 提高”가 요구된다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對外貿易不均衡문제는 기본적으로 商慣習과 文化 등 日本社會에 대한 外部의 이해부족에 기인한다는 종래의 論理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社會 二重性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生理의 日本社會는 그간의 安住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경제·정치적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에 처하여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韓國의 새로운 對日本接近戰略이 갖추어야 할 要件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것이 東아시아에서 日本의 국제적 責務이행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韓·日간의 雙務的 次元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日本과의 경제관계에서 유사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국들과의 단합된 對日接近方案모색을 主導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共同利益추구의 분위기 조성을 先導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EC統合과 政策對應』, 1990. 1.
2. _____, 『1990年代 國際經濟環境變化와 政策對應』, 1990. 6.
3. 閔充基, 『EC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3.
4. 愼鏞大 外, 『美國의 새로운 綜合貿易法』, 產業研究院, 1988. 8.
5. 韓國銀行 調查1部, 『週中海外經濟動向』, 第90-26號, 1990.
6. 產業構造審議會, 『90年代の通商産業政策 のあり方』, 1990. 7.
7. 阿達哲雄, 『EC市場統合の對應』, 經濟法令研究會, 1989. 2.
8. 日本貿易振興會, 『1992 EC域內 市場統合』, 1989. 5.
9. 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90.
10. *Economist*, Jul. 1990, pp. 7~13.